

언론

언론중재위원회 NEWS (구 PAC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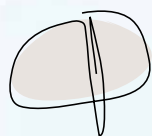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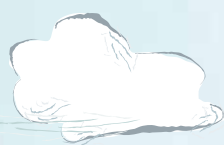


사람

www.pac.or.kr

바른후보, 공정한 언론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합니다



Special News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발족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보도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하여 불공정 보도라고 판단될 경우 사과문, 정정보도문, 경고문 등의 게재 또는 권고, 주의, 경고 등의 결정을 내려 공명정대한 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010

02

CONTENTS

2010. February. Vol 116



- | | | |
|----|-----------|--|
| 03 | 이달의 주요뉴스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발족 |
| 04 | 인터뷰 | "토론 문화의 정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권오곤 유고전범재판소 부소장) |
| 06 | 위원단상 | 쓰임새와 판짜기 (김길소 위원) |
| 07 | 직원마당 | 품위 없는 사회 (조준원 차장) |
| 08 | 조정후기 | 칸첸중가만 아는 진실 (김창현 조사관) |
| 09 | 백승찬의 영화세상 | 〈의형제〉와 남북문제 영화 |
| 10 | 용어해설 | 조정성립 |
| 11 | 고충처리인 탐방 | KBS 시청자서비스팀을 가다 |
| 12 | 위원회 소식 | |
| 13 | 사건 처리현황 | |
| 14 | 위원동정 | |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설치



서울신문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 성)는 2월 1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프레스센터 15층에 설치했다.

권성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동시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시·도지사과 기초단체장, 지역구의회 의원뿐만 아니라 교육감과 교육위원까지 선출하는 아주 중요한 선거”라며 “위원들이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공명정대한 선거보도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선거기사심의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제1차 회의에서 심의위원장에 양삼승 위원(63세, 변호사)을, 부위원장에 박기동 위원(53세, 변호사)을 각각 선출하여 본격적인 심의업무에 들어갔으며, 앞으로 151일 동안(2월 1일~7월 2일)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성·형평성·객관성 여부를 심의한다.

▲ 지난 1일 열린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현판식에서 권성 위원장(왼쪽에서 네 번째), 양삼승 심의위원장(오른쪽에서 다섯 번째)을 비롯한 심의위원들이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명단

위원장	양삼승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
부위원장	박기동 변호사
위원	조병철 전 세계일보 주필
	이용성 한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원병설 배재대 초빙교수
	김동규 건국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배정근 숙명여대 정보방송학과 교수
	박문용 공선협 공동대표 겸 집행위원장
	한국연 전 기독교방송 상무이사

권오곤 국제유고전범재판소 부소장

“토론 문화의 정착이

권오곤
국제유고전범재판소 부소장

- 제19회 사법시험 합격
- 서울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연구부장, 대구고법 부장판사 등 역임
- 유엔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현)
- 국제유고전범재판소(ICTY) 부소장 (현)
- 언론중재위원회 경남중재부장 (1993. 11. ~ 1995. 3.)



권오곤 국제유고전범재판소(ICTY) 부소장은 한국인 최초로 거물급 전범 사건의 재판장을 맡아 한국 법조계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보스니아 내전 당시 최악의 인종청소를 자행한 카라지치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권 부소장은 지난 해 말, 법조언론인클럽이 수여하는 ‘올해의 법조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재판 준비에 여념이 없는 권 부소장과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편집자 주>

‘올해의 법조인상’을 수상하신 소감은?

제가 예전부터 창설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곤 했던 법조언론인클럽에서 주는 상을 받게 되어 영광스럽습니다. 뉘른베르크 재판소의 수석 검사였던 잭슨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의 “법원이 사건을 재판하지만, 결국에는 자기(법원)가 재판하는 사건에 의하여 심판을 받는다 (While the court tries cases, the cases try the court.)”는 말을 염두에 두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좋은 판결을 남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제유고전범재판소 부소장으로 활동하시면서 어떤 자세와 철학으로 임하고 계십니까?

중용에 나오는 “진실로 가운데를 취하라(允執厥中)”는 말을 좋아해서 사무실 책상 앞에 걸어 놓고 있습니다. 재판을 영어로는 ‘hearing’이라고 하는데, 이는 양 당사자로부터 잘 들으라는 뜻입니다.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주관적으로 공정하였다는 것보다도 제3자에게도 공정한 것 같이 보이는(Justice must not only be done, but also be seen) ‘객관적 공정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늘 스스로 되새기고 있습니다.

카라지치에 대한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난해 10월 공판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변호인 없이 스스로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는 피고인이 준비 미숙을 이유로 계속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 다. 재판부는 고심 끝에 검찰 측의 모두진술만을 들은 후 11월 5일을 기해 직권으로 사무국에 피고인을 대리하여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대기 변호인(stand-by counsel)의 선임을 명하고, 그 변호인에게 재판을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올해 3월 1일까지 재판을 연기하였습니다.

해외 기구에서 활동하다 보면 우리나라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만, 성숙한 선진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개선할 점이 많이 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도 우리는 ‘토론 문화’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곳에서 일하다 보니 세계 각국에서 온 다양한 인재들이 자신의 의사를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점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설령 자신이 합리적인 결론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을 설명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은데, 국제기구에서 같이 근무한 많은 동료들은 논리의 작은 단계, 단계를 세심하게 밟아가며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을 보고 우리 사회에서도 과정의 중요성, 토론 문화의 정착이 반드시 필요함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언론중재위원으로 활동하시던 때를 회고해 본다면?

개인적으로 언론의 자유와 관련된 분야에 관심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반론권을 최초로 도입한 언론기본법이 제정될 때부터 그 과정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언론중재위원회에는 남다른 애정이 있었습니다. 경남중재부장으로 재임할 당시는 아직도 초창기여서 ‘반론권’이라는 개념을 신청인은 물론 언론사에게도 자세히 설명해 가며 중재를 성사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언론중재제도는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권리를 동시에 보호하면서 그 조화를 찾기 위한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가 많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밴쿠버 동계올림픽이 13일 개막식과 함께 시작되었다. 91개 국가 5,5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해 15개 종목에서 86개의 금메달을 두고 기량을 겨루는 이번 동계올림픽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는 기대도 크다. 전통적인 강세 종목인 쇼트트랙은 물론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따 낼 것인지의 여부에 관심이 쏠려 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스키점프에 한국판 ‘쿨 러닝’이라는 봅슬레이 경기까지 더해 요즘 우리는 겨울 스포츠 종목에 전 없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듯하다.

올림픽에 겨울 종목이 처음으로 선보인 것은 1908년 런던 대회였다. 처음으로 피겨 스케이팅이 정식종목으로 선정되었고, 제정 러시아가 금메달을 차지했다. 1차 대전이후에 벌어진 1920년 안트워프 대회에는 아이스하키가 추가되었다.

하계올림픽과 별도로 동계올림픽이 개최된 것은 1924년 프랑스 샤모니 대회가 최초이다. 의외인 것은, 겨울 스포츠의 절대 강자인 북유럽 국가들이 동계 올림픽 분리 개최를 반대했었다는 점이다. 그들은 이미 올림픽과 별도로 4년마다 겨울스포츠 대회를 열고 있었던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국제 겨울스포츠 주간’으로 열린 샤모니 대회가 성공을 거두자 다음 해에야 비로소 그 대회를 제1회 동계올림픽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한국인이 동계올림픽에 처음 출전한 것은 제4회 대회인

1936년 독일 가르미슈파르텐키르헨 대회였다. 김정연, 이성덕, 장우식 선수가 일본 선수단의 일원으로 참가했다. 같은 해 열린 베를린 올림픽에서 손기정 남승룡 선수 등이 일장기를 달고 출전한 것을 상기시킨다. 1948년 스위스 생모리츠 대회에는 최초로 태극기를 앞세운 대한민국 선수단이 출전했다.

하지만 오랫동안 겨울스포츠의 변방 신세를 벗어나지 못했던 한국은 1988년 캘거리 대회에서 시범종목으로 채택된 쇼트트랙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더니, 다음 대회인 1992년 알베르빌에서 김기훈 선수가 쇼트트랙 남자 1000M에서 금메달을 따내는 감격을 누린다.

1회 대회에서 16개국 294명의 선수만이 참가했던 것을 비교해 보면 동계올림픽의 규모는 몰라보게 성장했다. 하지만 여전히 겨울스포츠는 기후와 지형 등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지구촌 전부의 축제라고 불리기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고가의 장비가 필요해 부자 나라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며, 스포츠 메이커의 지원을 받는 사례가 많아 상업주의와 관련한 시비에서 자유스럽지 못하다. 어쨌거나 다시 성화가 타올랐다. 안팎으로 여러 문제가 산적해 있는 요즘, 국내 방송시간의 동계올림픽 중계권 분쟁까지 겹쳐 심란한 면이 없지 않지만, 우리 선수단의 선전이 다시 한 번 국민들을 하나로 만들어 주기를 바랄 뿐이다.

이런 애저런 동계올림픽의 역사



제1회 동계올림픽 포스터

쓰임새와 판짜기



김길소 위원
(강원중재부, 한국 전래오락 연구소장)

여러 가지 전통공예 가운데 우리 생활에 쓰임새가 가장 컸던 것이 목공예다. 산에서 원목을 날라 다 6척, 9척, 12척짜리 장목(長木)을 만들고 판목(板木)과 같은 재목으로 켜서 생활에 요긴하게 쓸 갖가지 공예품을 만들어 왔기 때문이다.

우리 선조들은 장롱과 장식장, 반닫이를 만들면서 이음새와 붙임새, 짜임새를 맞추었다. 커다란 한옥을 지을 때도 예외가 아니었다. 대못이나 쇠못을 박지 않아도 세월이 흐를수록 더 튼튼해져 오래 쓸 수 있고, 아름다운 자연미가 그대로 살아나는 짜맞춤 기법을 즐겨 써왔다. 어쩔 수 없이 끊어진 나무를 이어가야 할 때는 턱이음, 축이음, 장부이음 등 수 십 가지에 이르는 이음새 기법을 썼다. 또 화류목으로 서안을 만들 때는 ‘ㄱ자’, ‘ㄴ자’, ‘ㄷ자’형태를 ‘사괴(사개)물림’하거나 ‘쌍장부, 쌍탁짜임’등 복잡한 짜맞춤 기법으로 완성시켰다. 짜맞추기 기술은 하루아침에 터득되는 게 아니었다. 어려서부터 짜맞추기 놀이를 통해 기하학적이고 입체적인 구조의 메커니즘을 깊이 터득하고 있어야만 가능했다. 서양에도 모자이크(mosaic)라는 놀이가 있지만 우리 ‘짜맞추기 놀이’가 훨씬 어렵고 복잡했다.

특별한 정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놀이기구를 만드는 장인(匠人)의 솜씨와 구상에 따라 동물이나 기구 등 여러 가지 모형을 만들었다. 이 놀이를 하면서 빨리 맞추려고 했다가는 언젠가 아귀가 맞지 않고 뒤틀리게 된다. 욕심을 부렸다가는 백전백패하기 십상이어서 가장 알맞은 쓰임새를 찾아내야 한다. 우격다짐으로 짜맞췄다가는 ‘억지춘향’ 격이 되어버려 모래 위에 성 쌓기가 되어버린다. 항상 차분하게 순리대로 풀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이 놀이는 언제나 앞에 놓인 과제를 참을성 있고 섬세한 감각으로 꼼꼼하게 풀어나가는 사람이 이기게 마련이었다.

엇불인데 맞붙이고 걸침턱을 만들려면 명석한 두뇌라고 하더라도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어야 한다. 난마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는 1차 관문을 지났다고 하더라도 소매걸이를 하고 장부축을 끼우고 마지막으로 췌기를 박아야하는 경우까지 있다. 아이들의 이런 전래놀이 광경을 지켜 본 어느 서양 사람은 어려서부터 짜맞추는 지혜를 터득한 것이 밑거름이 되어 튼튼한 한옥이 지어지는 게 아니냐면서 우리 민족을 ‘짜맞추기의 귀재’라고 풀었다. ‘젓가락질’과 ‘공기놀이’의 섬세한 손놀림이 오늘의 IT산업을 일궈낸 밑바탕이 되었다는 예찬론을 떠올리게 한다.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라가 온통 시끄럽다. 출마를 선언한 예비후보들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지면서 선거분위기가 차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과거와는 달리 광역자치단체장과 의원, 광역의회 정당추천 비례대표 의원,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의원, 기초의회 정당추천 비례대표, 교육감, 교육위원 등 무려 여덟 번 투표를 해야 하는 이번 선거는 그야말로 지방정부의 새판을 짜야 하는 중요한 선거이다. 거기에다 오는 2012년 치러질 대통령선거의 새로운 교두보 마련을 위해 여·야 정치권 모두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기선잡기에 혈안인 형국이다.

국가나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정파적 이익만을 앞세운 요즘에 행태가 우격다짐으로 짜맞추려는 모습같이 비춰지고, 순리를 찾아 볼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소통과 조화’는 가장 알맞은 쓰임새를 찾아내는 정치의 요체이다. 이번선거를 통해 ‘국운 융성’을 가져올 훌륭한 한옥을 더욱 튼튼하게 짓기 위해서라도 국민들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냉정하고 정제된 자세로 견고한 재목을 선택해야 한다.

경인년 백호랑이의 힘찬 포효처럼 국가 백년대계를 반석위에 올려놓을 수 있어야한다.

품위 없는 사회

얼마 전 30대 후반의 판사에게 버릇 없다는 훈계를 들은 70을 바라보는 소송 당사자가 모멸감을 참지 못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사건이 화제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격권 침해라며 주의조치 권고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알려진 이후 법관보다 한술 더 뜨는 검찰의 위압적인 조사 태도와 막말 사례에 이어 제자를 인간쓰레기들로 칭하며 “바퀴벌레처럼 콧 밭아버리겠다”는 교사의 폭언 사례도 알려졌습니다.

이런 뉴스를 접하며 일부 몰지각한 상식이 없는 자들의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 치부해버리기에는 뒷맛이 개운치 않습니다. 이들에게서 공통점이 찾아지기 때문이지요. 전문직 영역에 편입되어 권력을 배후에 지니고 이에 힘입어 약한 자를 모욕한 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인성의 문제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감정이라 느끼는 ‘모욕’을 화두삼아 제도로부터 모욕받지 않은 사회를 “품위 있는 사회”라고 한 아비사이 마갈릿의 주장이 떠오르는 것은 자연스런 일입니다. 그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품위 있는 사회와 한참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요즘 격(格)을 다루는 담론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국가의 품격, 국격(國格)을 업그레이드 하자는 논의가 그것이지요. 동계올림픽이 한창입니다만 금메달을 딴 선수들에게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인 쾌거라고 칭찬하는 표현이 그다지 생소하지는 않습니다.

국제경기에 나가 최선을 다해 선전하는 선수들은 그 자체로 아름답고 감동적인 모습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메달 색깔과 수에 따라 국격이 달라지는지 의문입니다만, 올림픽을 국격 경연장으로 둔갑시키며 2등과 3등을 패배자로 여기는 이상한 문화는 꼭 짚어봐야 할 문제입니다. 동메달만 따도 너무나 환하게 기뻐하는 외국선수와 세계 2위를 해도 고개를 숙이는 우리 선수들의 대조적인 모습이 익숙한 장면으로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메달을 획득하면 연금점수에 따라 연금을 받는다는데 금메달은 90점, 은메달은 30점, 동메달은 20점이라 합니다. 은메달은 금메달 가치의 3분의 1에 불과하고 동메달은 이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인지, 이상한 잣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2등과 3등에게 사회와 제도가 모욕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목청을 높이는 개그맨의 외침에 공감이 쉽게 갑니다.

국격이 무엇인지 제각기 달리 이해되고 있는 듯하지만 여기에 정치적 의도나 이데올로기를 접목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단지 국가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너무 편협하고 저급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상식으로 통하고, ‘오웬취’를 외치며 영어를 국어와 동격에 올리며 국사를 선택과목으로 하는 교육정책 등이 오히려 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나는 평소 ‘국민의 인격을 존중하는 언론문화를 조성하여 언론의 품격을 높이는 데 작은 보탬이 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품위 있는 사회를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하지만 나는 을(乙)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갑을(甲乙)은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지요. 단지 순서나 구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사회생활을 좀 한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위 없는 사회에서 을(乙)이 살아가려면 자존감은 사치에 가깝다는 사실을 빨리 깨우쳐야 한다는 것도.

품위 있게 사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품위 있는 사회를 꿈꾸는 것은 정말 한낱 꿈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희망합니다. 품위 있는 사회를.



조준원
(예산회계팀 차장)

칸첸중가만 아는 진실

김창현 조사관 (서울제5중재부)



여성 최초로 해발 8,000m 이상 히말라야 14좌 완등에 도전하고 있는 산악인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신청해왔다. 조정대상 보도의 제목은 “칸첸중가만 아는 진실”. 언론사는 신청인이 칸첸중가 정상에 올랐음을 입증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며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신청인의 요구는 간단했다. 자신이 칸첸중가 등정에 성공했다는 내용만 게재해 주면 만족하겠다는 의사였다. 이에 대한 언론사의 반응은 냉담했다. 신청인이 등정에 성공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빙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고산등정에 성공했는지 여부는 사진으로 입증하는 것이 상례인데, 신청인이 제공한 사진은 정상인지 아닌지 도저히 알 수 없다고 했다. 사진으로 판명이 어려울 경우엔 본인의 합당한 등정 과정 설명, 동행했던 이들의 정교하고 믿을 만한 증언, 등반과정의 객관적 정황 등을 미루어 등정 여부를 판단하는데, 신청인의 경우엔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고 했다.

언론사는 더 나아가 신청인의 의도는 자신의 등정 성공 여부가 국내외 산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등정 성공을 언론사의 정정보도를 통해 공인받고자 하는 것이라며 정정보도 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담당 중재부는 반론보도를 권유했다. 신청인은 정정보도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지만,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담은 반론보도라면 받아들일겠다고 했다. 즉, 정상사진을 정상 주위의 바위를 배경으로 촬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당시의 심한 화이트 아웃 때문이며, 화이트 아웃 상황에서는 등반가의 안전을 위해 정상부근의 촬영도 인정되는 것이 관례라는 것과 외국 산악계에서 신청인의 칸첸중가 등정 성공을 인정한다는 내용 등이 반론보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했다.

언론사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반론내용을 모두 수용하는 대신 독자투고의 형식으로 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신청인은 자신이 원하는 반론내용과 제목이 모두 받아들여진다면 독자투고 형식을 수용하겠다고 했다. 얼마 후 “칸첸중가 등정에 성공했다”는 제목의 독자투고가 실렸다. 이를 확인한 신청인은 조사관에게 전화를 걸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비록 정정보도는 아니지만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충분히 게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만족한다고 했다.

정확한 진실은 ‘칸첸중가만 아는’ 것일 게다. 진실이 무엇인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신청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충분히 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백승찬의 영화세상

<의형제>와 남북문제 영화

송강호, 강동원 주연의 <의형제>가 흥행 순항중이다. 2월초 개봉과 함께 세계 흥행 기록을 깬 <아바타>를 저지하고 박스 오피스 1위를 차지하더니, 3주 만에 300만 관객을 돌파했다. 2월중 이렇다 할 경쟁작이 없는데다가 관객의 평가가 좋아 <의형제>의 흥행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의형제>는 남북 문제를 상업영화의 틀에 녹여 다룬다. 송

강호는 전직 국정원 요원, 강동원은 남파간첩이다. 송강호는 작전에 실패한 뒤, 강동원은 배신자라는 누명을 쓴 뒤 조직에서 버림받는다. 6년 뒤 우연히 만난 둘은 정체를 숨긴 채 동업을 시작한다. 이들의 동업이란 도망간 동남아 신부를 찾아 남편에게 데려다주는 일이다.

한국의 상업영화에서 북한은 오랫동안 철저한 타자였다. '반공'을 국시로 삼던 군사 독재 정권 치하에서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은 심지어 늑대(똥이장군)로까지 표현됐다.

예외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임권택 감독의 <썩코>는 빨치산 '썩코'와 그를 잡으려는 송 경사의 대결을 그린다. 임 감독은 쫓는 자와 쫓기는 자 모두에게 인간의 얼굴을 그려줌으로써, 이념 대결의 허망함을 표현했다. 이 영화가 대종상 우수반공영화상을 받은 것은 한국영화사의 아이러니다. 임 감독은 훗날 조정래 원작의 <태백산맥>을 통해 다시 한 번 비슷한 주제를 다뤘다.

북한이 상업영화의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한 영화는 '한국형 블록버스터'라 불린 <쉬리>였다. 영화 속 북한 테러리스트들은 이념으로 무장돼 있긴 하지만, 강제규 감독이 방점을 찍은 부분은 이념 대결보다는 도심 속의 액션이었다. 최민식이 연기한 북한의 테러리스트는 할리우드 액션 영화에 종종 등장하는 광기에 사로잡힌 악당과 같이 묘사됐다.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북한 군인은 남한 군인과 '형제'처럼 보인다. 북한군인 송강호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체제에 충실하면서도 조국이 '초코파이같이 맛있는 과자'를 만들기를 희망



하는 소박한 면모를 보인다. 그러나 남북 군인의 짧은 우정은 시대와 체제의 벽에 가로막혀 비극으로 끝난다.

남북 관계가 본격적인 해빙기에 접어든 김대중 정권 이후, 북한은 코미디 영화의 소재로 등장할 정도로 친근해졌다. <남남북녀>는 바람둥이 남한 대학생과 엘리트 북한 여대생의 로맨스를, <동해물과 백두산이>는 남한에 표류해 좌충우돌하는 북

한 군인의 코미디를 그렸다. <간 큰 가족>은 통일이 돼야 유산을 주겠다는 아버지를 만족시키기 위해 가족들이 가짜 통일극을 꾸민다는 내용이었다.

반면 <의형제>의 북한 사람은 동남아 신부와 비슷한 처지다. 남한의 주류 사회에 어울리지 못한 소수자란 의미에서다. 극중 송강호와 강동원은 동남아 신부에 대한 태도를 두고 처음으로 대립한다. 송강호는 동남아 신부를 인간이라기보다는 찾아 돌려줘야 할 '분실물'처럼 다루는 반면, 강동원은 같은 인간으로 바라본다.

결국 태도를 바꾸는 이는 송강호다. 남과 북을 떠나, 소수자에 대한 태도를 떠나, 자신과 강동원 모두 피붙이를 그리워하는 한 사람의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념, 계급, 인종보다는 '인간'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접근하면서 둘 사이의 긴장이 풀린다.

올해 한국전쟁 발발 60주년을 맞아 여러 편의 전쟁영화가 잇달아 선보일 예정이다. 가장 빠른 6월 선보이는 <포화 속으로>는 차승원, 권상우, 김승우, 탐(빅 뱅) 등 화려한 출연진을 자랑한다. 소수의 학도병이 압도적인 북한 정규군을 상대로 치열한 전투를 벌인다는 내용이다. 2002년 서해에서 벌어진 연평해전은 <연평해전>, <아름다운 우리> 2편의 영화로 동시에 제작된다. 특히 박경택 감독이 연출하는 <아름다운 우리>는 3D로 제작될 예정이다. 이들 전쟁 영화에서 북한과 북한 사람이 어떻게 그려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향신문 문화부 기자)

조정성립

지난 호에서는 조정과 중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중에서 조정은 피해자와 언론사의 분쟁에 중재위원회가 개입하여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조정절차를 거쳐 양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두고 조정이 성립되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신청인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중재위원회는 사건을 중재부에 배당하고, 담당 중재부는 곧바로 양 당사자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양측은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날짜에 중재위원회에 출석하게 되고, 조정심리가 열립니다.

조정심리에서 중재부장을 비롯한 중재위원들은 양측의 주장을 경청한 후 미리 검토한 사건 기록 내용을 바탕으로 적절한 조정안을 마련하여 양측에 권고합니다. 조정안은 청구내용에 따라 정정이나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는 내용이 될 수도 있고, 적절한 금액을 손해배상하라는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약간의 실랑이와 수정 끝에 양 당사자가 중재부의 조정안을 받아들여지면 합의한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한 조정합의서를 작성하고, 조정합의서에 양측이 서명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됩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성립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법적 강제력이 생깁니다. 만일 언론사가 합의서에 서명을 하고도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BOOK

이 달에 들어온 책

디지털 방송의 공익성

정용준 지음 | 커뮤니케이션북스 | 320페이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공익주의 방송정책과 이명박 정부의 시장주의 방송정책을 비교 평가하며 방송의 공익성을 고찰하는 책이 나왔다. 정용준 전북대 교수(신문방송학)는 '디지털 방송의 공익성'에서 "공익성이란 군사정권이 언론 통제를 목적으로 도입한 개념이나 지금은 시장주의에 맞서는 시민사회와 언론노조의 보루가 됐다"며 "지금의 시대에 맞는 이념과 패러다임의 진정한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지적한다.

1부인 '국가와 공익성'에서는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각국의 방송영상산업 전략을 다루면서, 산업화 과정에서 잃어버린 민주주의와 공동체 가치를 디지털 방송이 복원해야 함을 피력한다. 또한 2부의 방송시장과 공익성에서는 공영방송, 상업방송, 지역방송, 유료 방송, FTA 방송 협상에 관해 다루는 한편, 3부의 시민사회와 공익성에서는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이념과 정책 쟁점을 다룬 글과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필요한 시청자 복지 문제에 관해 논한다. 마지막으로 4부에서는 방송통신법과 디지털 공익성의 관계를 다루면서, 영국과 미국의 방송 설립기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공익성 개념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핀다.

저자는 한국의 방송통신법이 담아야 할 공익성 개념을 초기 언론기본법을 비롯한 방송법의 변화 과정, 공익성에 대한 전문가와 국회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고찰하면서, 디지털 시대에는 공익성 이념과 보편적 서비스 이념이 보완적으로 결합하여 새롭게 설정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저널리즘과 선진 민주주의

피터 J. 앤더슨 외 지음 | 커뮤니케이션북스 | 458페이지



이 책은 "경성 뉴스에서 연성 뉴스로 이탈하는 소비자를 붙잡기 위해 저널리즘은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뉴스의 범위와 깊이는 어디까지인가?" "미디어는 얼마나 균형 있는 뉴스를 보도하는가?" 등과 같이 그동안 파편적으로 논의되었던 국가별 저널리즘의 사례를 커다란 틀 속에서 들여다보며, 영국을 비롯해 미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일본의 뉴스 미디어를 비교함으로써 저널리즘의 미래를 예측한다.

1장부터 4장에 이르기까지 저널리즘의 역사적·철학적 측면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으며, 결론에서는 우리보다 앞선 민주주의의 국가에서 오늘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미디어의 역할과 현상을 바탕으로 저널리즘의 미래에 대한 방향을 총체적으로 정리하고 제시한다.

〈정책연구팀〉



최수형 시청자서비스팀장

서울 여의도 KBS 본관 4층에 자리한 KBS 시청자서비스팀은 무척 바빴다. 점점 늘어나는 시청자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느라 최수형 팀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였다. 방금 회의가 끝난 테이블에서 최 팀장은 “지난해 말에 와서 아무 것도 모른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공영방송으로서의 책임을 애기할 때에는 확신에 찬 단호함을 보이기도 했다.

30여명으로 구성된 KBS 시청자서비스팀은 크게 세 가지 업무를 담당한다. 방송 내용과 관련한 시청자들의 상담을 받고, 시청자위원회 운영 등 각종 시청자 관련 사업을 벌이며, 옴부즈맨 프로그램을 제작 방영한다. 특히 손봉호 위원장(고신대 석좌교수)을 비롯한 11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시청자위원회의 활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평가에서 항상 최고점을 기록할 정도라고.

KBS 시청자위원회는 월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한다. 방송 편성과 프로그램 내용 등에 관해 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하면, 그 자리에 출석한 제작부서 국장들이 그에 대해 답변하고 제작에 반영하는 시스템이다. “위원님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하셔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 팀장의 설명이다.

시청자위원회는 3개의 소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그 중 시청자 권리보호 소위원회는 매월 제기되는 시청자들의 의견 중 권리침해 사항만을 선별하여 시청자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시청자 권리보호 소위원회에서 시청자위원들과 함께 간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강상구 KBS 고충처리인이다. 법무팀장을 역임했고, 현재 서울남부지법 조정위원으로도 활동중인 강상구 고충처리인은 해박한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한 달에 300건 가까이 접수되는 시청자들의 권리침해 주장을 면밀히 검토해 시청자위원회에 상정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해당 시청자에게 이메일 등으로 통보한다.

KBS 시청자서비스팀을 가다 강화되는 시청자주권에 맞는 서비스 강화

또한 시청자들이 보도내용의 정정을 요구하거나 초상권 침해 등을 호소해 오면 이를 검토하여 해당 내용의 수정이나 모자이크 처리, 또는 다시보기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절차나 법원 소송으로 진행되기 전에 방송 내용의 인권침해 사항을 미리 체크하여 분쟁의 확대를 막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루에 1,500건이 넘는 시청자들의 상담을 접수하고, 이를 적극 수렴하여 활발한 시청자위원회 운영을 통해 제작에 반영하는 KBS의 활동은 타 언론사들의 귀감이 되기에 충분하다. 무엇이 KBS로 하여금 이러한 일을 가능하게 했을까?

최수형 팀장은 그것이 공영방송으로서 KBS가 갖는 의무라고 얘기한다.

“KBS는 무엇을 하든 공영방송의 철학에 의거하기 때문에 자기 검열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청자 주권은 날이 갈수록 강화되니까 그에 맞춰 시청자 서비스도 강화돼야겠죠.”

앞으로도 시청자와 제작진 사이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시청자와 함께 하는 사업법 위도 더 늘려갈 예정이라고 한다.

“그럴 수밖에 없죠. KBS니까요.” 최 팀장의 설명은 명료하다.

(글 : 여운규 차장, 사진 : 박경미(이상 홍보팀))



강상구 고충처리인

소식지의 새로운 변신 편집 전면 개선, 발행부수 확대



언론중재위원회 소식지 「언론  사람」이 2010년 2월호(제116호)부터 새롭게 바뀌었다.

먼저 표지의 변화가 눈에 띈다. 12면으로 발행되던 기존 소식지에 표지 4면을 추가하여 디자인적 요소를 더하고 전체적으로 소책자 형태를 이루도록 했다. 내용면 역시 기존의 신문 형태 편집에서 탈피하여 가독성 높고 세련된 편집 디자인을 도입해 대국민 홍보매체로서의 면모를 갖췄다. 이를 위해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1월 공개 입찰을 통해 소식지 제작업체를 공모한 결과 전문 업체를 선정, 2010년 소식지 제작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수록 내용에 대한 변화는 이미 진행되어 왔다. 중재위 내부 구성원간의 뉴스레터 역할을 하던 소식지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외 홍보매체로의 전환을 선언한 후,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읽을 수 있으면서도 언론피해 구제제도 전반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수록 내용의 개편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기존의 위원 칼럼 외에도 연재만화, 영화평 등 대중적인 읽을거리를 보강하는 한편, 위원회 업무와 언론피해 구제절차 등을 설명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거기에 언론사 탐방기사등을 통해 언론계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했다. 발행부수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10월호부터 기존 600부에서 3,000부로 발행부수를 늘린 후 11월호부터 1월호까지는 5,000부가 발간되었으며, 2월호는 8,500부가 발간되어 전국 공공기관 및 학교, 기업체 등에 무료로 배포된다. 중재위는 앞으로 발행부수를 1만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법원 인사로 중재부장 12인 인사이드

2월 11일과 22일자 법원 인사로 인해 중재부장 12인이 근무지를 옮기게 되었다.

소속중재부	성명	현직	변동사항	일자
서울제1중재부	여상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2010. 2. 22.
서울제2중재부	이병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수석부장판사	2010. 2. 22.
서울제3중재부	이민영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퇴직	2010. 2. 11.
서울제4중재부	송평근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퇴직	2010. 2. 11.
서울제5중재부	변현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2010. 2. 11.
서울제7중재부	권택수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2010. 2. 11.
대구중재부	조창학	대구지법 부장판사	퇴직	2010. 2. 11.
경기중재부	신용석	수원지법 부장판사	퇴직	2010. 2. 11.
강원중재부	송경근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인천지법부장판사	2010. 2. 22.
전북중재부	황현찬	전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2010. 2. 22.
경남중재부	최인석	창원지법 수석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2010. 2. 11.
제주중재부	김현룡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2010. 2. 22.

정기 위원총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최예정

2010년도 언론중재위원회 정기 위원총회가 오는 3월 15일 10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태평로)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다. 안건은 운영위원 및 시정권고위원 선출, 2009년도 사업실적, 결산 및 2010년도 사업계획, 예산 승인 등이다. 한편 위원총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하고 규칙개정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제2차 운영위원회가 3월 8일 개최될 예정이다.

네이트 상담 서비스 개시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10일부터 인터넷 포털 네이트(www.nate.com) Q&A에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사용자들은 정정 보도, 손해배상 등 언론중재와 피해구제에 관련된 질문을 네이트 Q&A 페이지에 올린 후 전문가의 답변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페이지에는 중재위원회가 상담을 제공한다는 사실이 위원회 로고와 함께 표시된다. 한편 중재위원회는 2월 말부터 네이버 '지식IN'에도 이와 같은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1월 조정신청 281건, 중재신청 20건

조정·중재신청 처리현황

언론중재위원회는 2010년 1월 한 달 동안 모두 281건의 조정사건을 접수·처리했다.

처리결과별로 살펴보면 조정성립 44건, 조정결정 17건(동의 15건, 이의 2건), 조정불성립결정 19건, 기각 35건, 취하 164건, 계류 2건이며, 피해구제율은 72.5%를 나타냈다. 피신청인 매체 유형별로는 인터넷뉴스서비스가 15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신문 71건, 신문 34건, 방송 15건, 뉴스통신 5건, 잡지 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위원회는 1월 한 달 동안 20건의 중재신청을 접수하여 19건의 중재결과와 1건의 기각결정을 내렸다. 청구권별로는 정정청구가 14건, 반론청구 6건으로 나타났다.

1월 조정 중재신청 처리현황 (2010.2.25.현재)

구분 월별	청구명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조정결정			조정 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계류	
1월	정정	163	22	13	1		12	34		80(49)	1	65.6
	반론	12	3		1					8(7)		83.3
	추후											
	손배	106	19	2			7	1		76(62)	1	79.8
합	계	281	44	15	2		19	35		164(118)	2	72.5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
※피해구제율=피해구제건수/조정건수
※피해구제건수 = 조정성립건수 + 조정결정
중 동의 + 조정결정중 이의·조정불성립결
정·취하중 정정 또는 반론기사 등이 이루어
진 건수

중재신청 처리현황

구분 월별	청구명	청구 건수	처리결과		
			중재 결정	중재 화해결정	기각
1월	정정	14	13		1
	반론	6	6		
	추후				
	손배				
합	계	20	19		1

시정권고 현황

시정권고소위원회는 1월 27일 열린 2010년도 제1차 회의에서 자체 심의한 언론보도 중 총 43건의 법
익침해 내용에 대해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

침해유형은 자살관련 상세묘사 40건, 성폭력 피해자 신원공개, 사생활 침해, 여론조사 보도요건 기준
위반이 각 1건이며, 매체 유형별로는 인터넷신문 35건, 지역일간지 8건이다.

상담 현황

언론중재위원회는 2010년 1월 한 달 동안 182건을 상담했다.상담 처리결과로는 조정절차 안내가 140
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안내가 17건, 타기관 안내가 14건, 법적절차 안내 10건, 재상담 예정 2건,
자체종결 2건 순이었다. 상담 매체유형을 살펴보면 인터넷뉴스서비스 144건, 인터넷 신문 98건, 일간
신문 71건, 주간신문 37건, 방송 38건, 뉴스통신 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 현황

언론중재위원회는 1월 5일 오마이뉴스 대상 교육을 시작으로 1월 한 달 동안 4차례의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대상기관별로 보면 언론사 2건, 교육연수기관 1건, 기타 1건 등이다

COMMITTEEMEN



지역 MBC와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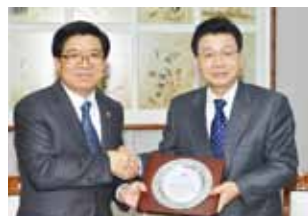
권성 위원장은 지난 11일 지역MBC 전략지원단과의 인터뷰에서 위원회 업무 및 피해구제 절차 등을 소개했다. 이 날 인터뷰는 12일 대구 MBC를 시작으로 각 지역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 방영됐다.



경기도청

무료변론 법률서비스 MOU체결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위철환 위원(경기중재부, 사진 오른쪽)은 1월 28일 경기도청 회의실에서 경기도청,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와 함께 무료변론, 무료상담 법률서비스 MOU를 체결했다



대원리인영원

강원도지사에 감사패 전달

강원지방변호사회 회장 이택수 위원(강원중재부, 사진 왼쪽)은 지난 4일 강원도청 통상상담실에서 김진선 강원도지사에게 '서울고등법원 추천원외재판부 설치 확정'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했다.



‘언우회’ 회장에 황용경 변호사

경남중재부 전현직 위원 모임인 ‘언우회’는 지난 9일 총회를 열어 제2대 회장으로 황용경 변호사(전 중재부장)를 선출했다. 이 자리에서는 또 임경숙 전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최인석 경남중재부장의 영전을 축하하기도 했다.



언론진흥기금 관리위원 위촉

어경택 위원(서울제5중재부, 前동아일보 편집국장, 사진 왼쪽)과 유익선 위원(서울제7중재부,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은 지난 10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이성준)의 언론진흥기금 관리위원으로 위촉됐다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위원장

한부환 위원(서울제6중재부, 변호사)은 지난 11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 산하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한국언론정보학회 제12대 회장 선출

차재영 위원(대전중재부, 충남대 사회과학대 학장)은 1월 29일 한국언론정보학회 제12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통신위성 시대의 국제 커뮤니케이션」 번역 출간



이동근 위원(광주중재부, 조선대 신방과 교수)가 번역한 「통신위성 시대의 국제 커뮤니케이션」이 1월 8일자로 출간되었다.



“무료 지상파 디지털 TV플랫폼 사업의 의미와 과제” 세미나 사회

한진만 위원(강원중재부,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은 지난 1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무료 지상파 디지털 TV플랫폼 사업의 의미와 과제 세미나”(한국언론학회 개최)에서 사회를 맡았다.

■ 언론중재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나요?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제7조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준사법적 독립기구로,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쉽고 빠르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조정·중재 신청을 언론중재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14일 이내에 처리되며, 비용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 신청 대상 매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송, 정기간행물(신문, 잡지 등), 뉴스통신, 인터넷 신문, 인터넷 뉴스 서비스(포털 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 신청절차

① 신청기간

조정·중재의 신청은 대상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보도가 있은 후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② 신청인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개인은 물론 일반단체나 회사, 공공기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신청방법

- 신청서를 직접 작성 후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조정·중재신청서는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 담당직원에게 신청 내용을 직접 진술하는 것으로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메일, 홈페이지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 등 전자문서를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상담 전화번호 02)397-3000, 3010, 3100

e-mail counsel@pac.or.kr

홈페이지 www.pac.or.kr

주소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 15층 (100-705)





바른후보, 공정한 언론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공정한 선거보도를 위해
이런 일을 합니다.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임기만료에 이한 선거의 경우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5일)부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합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보도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하여 불공정 보도라고 판단될 경우 사과문, 정정보도문, 경고문 등의 게재 또는 권고, 주의, 경고 등의 결정을 내려 공명정대한 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사심의위원회는
2010년 2월 1일부터 2010년 7월 2일까지 운영됩니다.”



불공정 보도로 인한 선거후보자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기사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심의, 의결하여 시정요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될 때 사과문, 정정보도문, 경고문 등의 게재 또는 경고, 주의 등의 결정을 내리고, 시정요구 사항이 이유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각하, 기각 등의 결정을 내립니다.



선거후보자와 언론사의 반론보도청구회부사건을 심의합니다.

선거기사로 피해를 받은 후보자(정당의 경우 중앙당)는 언론사에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후보자나 언론사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이를 회부할 수 있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회부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의하여 인용 또는 기각,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